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PDF issue: 2025-07-15

少子化対応と無償化方策ー2022 年第 209 回～2023 年第 211 回の国会審議にみる「教育無償化」論議の経緯と特徴ー

渡部，昭男
梁，洙京

(Citation)
日本教育学会第 82 回大会

(Issue Date)
2023-08-24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Version of Record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82899

저출산 대응과 무상화 방안

—2022 년 제 209 회～2023 년 제 211 회 국회 심의에서 보는 「교육 무상화」논의 경위와 특징—

○와타나베 아키오 (오사카 세이케이 대학・특별초빙교수)

서론. 국회 심의에서 보는 「교육 무상화」 논의 분석—과제・대상・방법

교육 무상화 논의가 언론에서 성행한 것은 교육 무상화 개헌론이 나온 2016 년이다. 2016 년 제 190 회부터「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일본 헌법 제 41 조)으로 여겨지는, 국회에서의 교육 무상화 논의 경위와 특징을 밝히기 위해 국회 심의 분석을 시작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제 201 회(2020.1-6)@제 79 회 대회, 제 203 회(동 10-12) 제 204 회(2021.1-6)@제 80 회 대회, 제 205 회(동 10) 제 207 회(동 12) 제 208 회(2022.1-6)@제 81 회 대회에서 보고했다. 본 보고에서는 제 209 회(2022.8.3-5/제 26 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결과에 따른 소집으로 실질적인 심의 없음), 제 210 회(2022.10.3-12.10), 제 211 회(2023.1.23-6.21)를 대상으로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https://kokkai.ndl.go.jp/#/을 이용하여「이차원 저출산 대책」, 「교육 무상화」, 「저출산, 무상화」 등으로 검색하여 나온 곳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특히 저출산 대응 및 무상화 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위와 특징을 밝혔다.

1.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이차원 저출산 대책」 연두 회견 및 시정 방침 연설을 둘러싼 반향·논의

기시다 수상이 연두 회견(2023.1.4)에서 말한 「이차원 저출산 대책」은, 제 211 회 국회 심의에 있어 커다란 테마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 용어는 국회 회의록에서는 이전에도 4 건(2014·187 회, 2019·198 회, 2022·208 회, 210 회의 각 1 건)이 검색되었으나, 211 회에서는 100 건 203 개소(2023.7.13 현재)가 되었다.

「이차원 금융완화」(2013.4 쿠로다(黒田) 총재 회견)가 2013 년 제 183 회 회기 도중부터 국회 회의록에 처음으로 등장해 305 건·540 개소(4～6 월 3 개월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차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상 자신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 말을 바꾸는 등 임팩트가 부족했다(「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도 덧붙여 「or 검색」으로 118 건 271 개소/본회의 22 건, 예산 위원회 26 건·공청회 7 건, 후생 노동 위원회 18 건 등). 1/23 시정 방침 연설에서는 「어린이가 먼저인 경제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반전」 「어린이 가정청 아래에서 현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아동·육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6 월 기본 방침까지 장래적인 아동 육아 예산 배증을 향한 큰 틀을 제시」라고 말했지만, 재원의 명확한 뒷받침은 없었고, 국회 심의에서는 그 진의나 진심도에 질의가 집중되었다.

2. 「이차원의 저출산 대책」관련 특기 항목 및 급격한 저출산에 관련된 현상 인식

2023.1.4	기시다 수상 연두 회견 「이차원 저출산 대책」
2023.1.19	「이차원 저출산 대책」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첫 회합
2023.1.23	제 211 회 정기 국회 소집(～6.21), 기시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
2023.2.28	인구동태통계속보(2021 년 12 월분)(후생노동성 공표)(출생수 80 만명 이하)
2023.3.31	아동육아정책 강화에 대하여 (시안)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실현에 대하여～(관계부처 회의, 어린이 정책 담당 대신)(가속화 플랜 포함)
2023.4.1	어린이 대강령・어린이 기본법 시행, 어린이 가정청 창설
2023.6.2	2021 년 인구 동태 통계 월보 연계(개()의) 상황(후생노동성 보도 발표)(출생수 77 만 747 명/전년 81 만 1622 명보다 4 만 875 명 감소. 출산율(인구 천명 대비)은 6.3/전년 6.6 보다 저하. 합계 출산율 1.26/전년 1.30 보다 저하)
2023.6.13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결정(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
2023.6.16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기본 방침 2023/국무회의 결정)(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의 발본 강화 포함)

국회 심의와 병행한 「이차원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특기 사항은 부표와 같다. 2/28 속보를 바탕으로 3/31 시안에서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80 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소가 될 전망이며 정부 예측보다 8 년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2030 년은 저출산 대책의 분수령」, 「2030 년대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젊은 인구는 현재의 배속으로 급감」 「앞으로의 6～7 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아동・육아 정책의 기본 이념에 「①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고 ②사회 전체의 구조·의식을 바꾸며 ③모든 육아 가정을 끊임없이 지원한다」는 3 가지를 정하고, 향후 3 년간에 임하는 「아동 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책정하기로 했다. 내각 관방의 전세대형 사회 보장 구축 본부 산하에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6/13 전략 방침을 결정하고, 6/16 기본 방침 2023 에 포함시켰다.

3. (결혼·) 임신·출산으로부터 고등 교육까지의 일체적·종합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무상화

국회 회의록에서 「소자화 and 무상화」로 검색되는 제 210 회: 30 건·206 개소, 제 211 회: 112 건·1,294 개소에서 논란의 경향과 특징을 찾았다. 제 210-211 회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라는 것도 있어, 각 당의 공약을 근거로 한 국회 심의가 두드러졌다. 단체의 무상화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 대응으로서 「(결혼・)임신・출산으로부터 고등 교육까지의 일체적・종합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무상화」를 내세우는 형태로 파고든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당의 공약을 포함하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 민주당 「극진한 저출산 대책·육아 지원을 실현한다」긴급 대책으로서의 결혼·출산 지원, 대담한 아동 수당이나 육아 휴직 급부의 확충, 보육 등 육아 지원, 방과후 아동 클럽의 확충 등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고등 교육에 있어서 다자녀 세대 등 중산층에 대한 수학 지원을 확충해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에 선행 도입.

・공명당 「육아·교육을 국가 전략으로」「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입국」출산 육아

일시금(42 만엔)을 증액, 0～2 세 아동 가정의 산후 케어 전국 전개, 자녀 의료비 조성 확대(고 3 까지 무상), 장학금 상환 부담 경감, 장학금 반환 지원 제도의 전국 전개, 수학 지원 신제도를 중간 소득 세대까지 확충.

・입헌 민주당 「칠드런·퍼스트로 경제적 지원 확충과 예산 확보」대학등 등록금 무상화, 학교 급식 무상화, 고 3 까지 모든 자녀에게 아동 수당 15,000 엔, 관련 예산 대 GDP 대비 3%대(현상의 배증 現状の倍増).

・일본 유신회 「출산 무상화×교육 무상화. 미래 세대에의 투자 철저」출산 관련 의료에의 보험 적용+출산 육아 바우처의 지급으로 출산의 실질 무상화 실현, 교육 전 과정의 무상화, 급식 무상화.

・국민 민주당 「『사람 만들기』야말로 나라 만들기」육아・교육 지원책으로부터 소득 제한 철폐, 학교 급식・교재비・수학 여행비 무상화, 고등 교육 수업료 감면, 급부형 장학금을 중소득 가구에도 확충, 교육 국채 창설.

·일본 공산당 「육아·아이에게 「냉정한 나라」에서 「친절한 나라」로」아동 수당 전원 지급, 18 세까지 의료비 창구 부담 무료, 0 세부터 보육료 경감, 급식비·교재비 제로, 학비 반감, 입학금 폐지, 급부 장학금 확충.

·레이와 신선조 「대학원까지의 교육 무상·장학금 변제 면제」 「아동 수당 매월 3 만엔으로」(고교 상당 연령까지).

결론. 무상화 방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출산 대응의 3 층 구조와 원활하고 토탈적인 지원책

기시다 수상이 「유아 교육, 보육 무상화, 고교 등 등록금 지원, 고등 교육 무상화」를 설명구로 하고 있는 것을 회의록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0～2 세 아동으로 무상화 대상(주민세 비과세)이 되고 있는 것은 10%, 고등 학교 등 등록금 지원으로 소득 제한(연봉 기준 910 만엔 이상)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약 20%, 고등 교육 무상화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주민세 비과세～연수 기준 380 만엔 미만) 것은 약 15%라고 알려져 있다.「끊임없는 지원」이라는 용어도 국회 심의에 등장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원활하고&토탈적인 지원책은 되고 있지 않다. 저출산 대응은, ①육아와 취업·소득 보장의 양립 ②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③육아로 인한 심리적 부담 경감·사회 협동적 지원의 3 층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육아 형벌」이라는 용어가 2020 년 제 203 회 회의록에 첫 등장해 제 211 회에서는 11 건·13 개소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봉적인 가짜 무상화 정책으로는 저출산 트랜드를 끊고 반전시킬 만한 임팩트는 없다.